

‘2% 성장’ 의지 담은 재경부 첫 청사진… 예산확보 관건

재경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들여다보니

하강하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해소 방침 펀드 대책은 재경부·곳간은 기획처 엇박자 우려

정부가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경제정책 청사진인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내놨다.

재정과 세제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작년 1.0% 안팎에 머무른 성장률을 올해 2.0%로 끌어올리고, 하강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의지를 투영했다.

날이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지방·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노년층 등과 함께 발맞춰 가는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예산 기능 분리 이후 재정경제부가 단독으로 내놓은 첫 경제 계획이다. 정책 실행력을 좌우할 예산 연계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광복 100주년, 2045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이라는 거대 담론을 내걸었지만, 기획예산처가 별도로 추진하는 ‘미래비전

2050’과 시간 축과 정책 초점이 겹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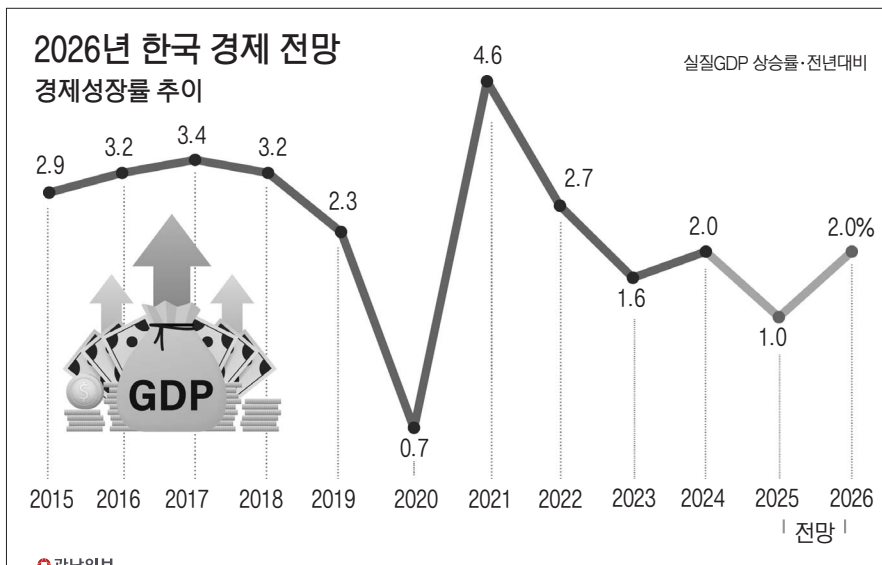
△‘2%대 회복’ 정책의지… 양극화 극복에도 방침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2.0% 성장’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를 한단계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지다.

지난해는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딛고 1.0% 부근 성장을 가까스로 달성하는 정도였는데 올해는 2.0%로 성장세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총지출 증가율 2~3%대였던 전임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벗어나 8.1%의 확장재정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투자 위축 등 생산성



정책으로 2% 아래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 범국가적인 전략 산업 육성을 꾀한다.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 방위산업 4대 강국, 바이오산업 육성,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사업 경쟁력 제고가 그 예다.

인프라·기술, 산업, 인재 등 전 분야의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다.

AI 전환(AI)과 녹색 전환(GX) 등 산업 대전환, 중국 기술추격, 각국의 자국 우

선주의 등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에 한국도 뒤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 국부 창출도 실행에 옮길 뜻을 밝혔다.

이번 성장전략에는 구조적 양극화 해소 과제도 담겼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를 깨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5급3특’ 체제로 상징되는 지방수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양극화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비수도권,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굳어지면서 단순한 경기 부양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만들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거저에 깔려 있다.

성장을 제고와 분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 추가 하락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읽힌다.

△예산 확보 빠져 세제 중심…실행력 의문

강력한 정책 의지에 비해 정책 실행수단은 과거에 비해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대책은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재경부가 마련한 첫 청사진이다.

이 때문에 세제·정책금융·규제개선 패키지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작년 말 국회에서 확정된 재정 지출 확대에 더불어 공공기관 투자 확대, 정책금융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다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주택을 매수할 경우 세부담 완화 등 세제 지원책을 전면에 배치했다.

하지만 ‘퇴직연금 기금화’와 같은 구조 개혁 과제 등은 추진 계획과 세부 실행 방안이 모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접 비교하기에는 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때는 보조금 지급 등으로 정부가 직접 시장을 창출하는 대책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간접 유인 정책이 주를 이뤘다.

나랏돈을 투입하는 직접적인 방식이 밀리고, 펀드·보증·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책이 전면에 배치됐다.

예산 편성권이 없는 재경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이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설계자의 역할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일 기획처가 더 깊게 참여했다면 ‘실탄’을 투입하는 향후 재정소요 추계와 단계별 이행계획이 더 구체화하면서 정책의 강제력과 속도감이 더해졌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전략의 성패는 향후 기획처와 협업을 통해 얼마나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데이터처 통계조사 기여 전남도 등 표창

10개 지자체·공무원 등 포상

국가데이터처는 최근 대전 국가데이터 인재개발원에서 ‘2025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 포상 수여식’을 열고 광업·제조업조사 등 국가통계조사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와 유공자를 표창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여식에서는 전남도와 강원 춘천시, 부산시 북구 등 통계조사에 적극 참여한 10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조사요원 10명이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받

았다.

데이터처는 매년 지자체와 협력해 광업·제조업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형중 데이터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사요원과 지자체의 헌신으로 광업제조업 조사와 같은 주요 국가통계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데이터 생산은 물론 국민과 국가의 미래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유용한 통계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d0316@



국가데이터처는 9일 대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서 ‘2025년 통계업무 진흥유공 포상 수여식’을 열고 전남도 등 국가통계조사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와 유공자를 표창했다.

나주 LVDC 인증센터, ESS·전기차 충전 고효율 인증

호남권 최초 시험기관 지정…에너지산업 시험·인증 거점 부상

전남이 에너지산업 핵심 설비의 시험·인증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전남도는 나주혁신산단에 위치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LVDC 인증지원센터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전력저장장치(ESS)와 전기차 충전장치 분야 ‘고효율 기저체 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호남권에서는 처음이다.

LVDC 인증지원센터는 이번 지정을 통해 ESS와 전기차 충전장치에 대한 공인 시험과 성능 검증, 시험성적서 발급 등 고효율 인증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됐던 시험·인증 절차를 전남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 지역 에너지 기업들은 시험을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했던 부담을 덜고, 인증 대기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제품 상용화 속도 제고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와 ESS,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기업과 실증 사업이 집중된 전남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효율 기저체 인증 제도는 정부가 기저체의 에너지 절감 성능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고효율 제품의 시장 확산을 유도하는 핵심 제도다. LVDC 인증 지원센터는 정격·부하 부하 효율, 변환

손실 특성, 운전 조건별 성능 평가 등 고효율 인증에 필요한 시험 설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저전압 직류(LVDC) 기반 전력변환·배전 기술의 실증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전남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연구·실증·인증·사업화로 이어지는 에너지 기술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분산에너지와 직류 기반 전력 인프라, 전기차 확산 등 국가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전략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고효율 인증 시험기관 지정은 전남 에너지 산업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며 “시험·인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전남을 에너지산업 핵심 거점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신보, 3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전남신용보증재단은 ‘2025년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 2차 사후심사 통과와 더불어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3년 연속 획득하는 등 기관의 윤리·인권경영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신보는 조직 내 부패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분석하고 예방과 통제, 윤리·청렴 인식 제고 활동 등 지속적인 관리

노력으로 ISO 37001 2차 사후심사를 직접 판정으로 통과하며 인증을 유지했다.

아울러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 대상 정기 인권교육과 인권침해예방 및 구제절차 운영, 주요 사업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 정례회 등 인권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3년 연속 획득하며 인권경영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대

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종합달성률은 98.5% (330점 중 325점)로 전년 대비 1.3%p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며 윤리·인권 가치가 경영 전반에 내재화돼 있음을 증명했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임직원 모두가 일상 업무 속에서 윤리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도민 신뢰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d0316@

코스피, 6거래일 연속 최고치 장중 상승 전환 ‘4586.32’

코스피가 지난 9일 하락장으로 시작했지만 상승세로 돌아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보다 33.95p(0.75%) 오른 4586.32에 장을 마치며 6거래일 연속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지수는 전장보다 22.34p(0.49%) 내린 4530.03으로 출발해 장 초반 한때 4500.48까지 내려 4500선을 위협받았으나, 상승세로 전환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3.86p(0.41%) 오른 947.92에 장을 마치며 4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1340억원, 1조1967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반면 외국인은 1조6034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인 1495억원 매수를 나타냈다.

간밤 뉴욕증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각각 0.55%, 0.01% 상승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44% 하락했다.

엔비디아(-2.15%) 등이 내리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1.83%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1조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연·달라 환율은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총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7.0원 오른 1457.6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2.8원 오른 1453.8원으로 출발한 뒤 오후 한 때 1459.4원까지 오르며 1460원선에 바짝 다가가기도 했다.

환율은 지난달 29일 외환당국 개입으로 1429.8원까지 내렸다가 새해 들어 연일 오름세다.

임재용 기자 djawodyd0316@

